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13호
2019. 6. 24

정책동향

- 향후 4년간 노후 기반시설에 32조원 투자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황 및 개선 방안
- 건설 관련 대학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시장동향

- 4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

산업정보

- 2018~2019년 1/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SOC 투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향후 4년간 노후 기반시설에 32조원 투자

- 교통, 방재, 지하관로, 지하구 등 15종 시설물 대상으로 투자 예정 -

■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년대의 집중 건설로 인해 최근 들어 급속히 노후화

-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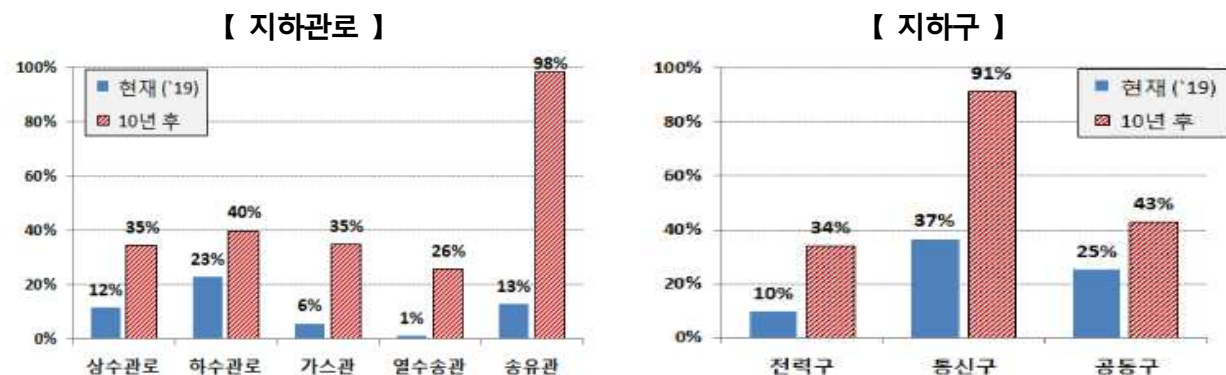
<그림 1>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



자료 : 국토교통부.

- 지하 시설물은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함.

<그림 2>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



자료 : 국토교통부.

■ 정부,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위협 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 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의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함.
 -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 시설물은 2019년 말까지 긴급 보수,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예산(2019년 3,792억원 추경 추진 중)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임.
 - 2020~20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는 최근 5년보다 연평균 약 2조 8,000억원이 증가한 연간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할 예정임.
 - 20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¹⁾ 시설을 하위 법령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 기준 마련으로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 과제(R&D)로 안전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

■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설물의 스마트화 필요

- 노후 인프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은 시설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를 벗어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검토도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50년 이상 된 교량은 35개²⁾에 달하고 있음.
- 영국은 시설물에 광섬유 감지 시스템(fibre optic sensing system)과 같은 IT 기술을 접목해 인프라의 스마트화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1)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방재시설(댐, 저수지, 하천), 지하관로(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지하구(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2)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2018. 8).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황 및 개선 방안

- 건설현장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 필요 -

■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설·운영 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음.
 -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별표 5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상 공사를 4가지 유형(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으로 구분하여,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표 1> 참조).
-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정률 및 현장 상황과 관계없이 획일화되어 있음.
 -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법정 기준 인원(1~3인)을 계속 배치하도록 규정
 - 이는 품질관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공사 초기 준비 기간 및 준공 전 기간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함.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을 보면,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됨.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03. 07. 18(2015. 12. 23 수정))에 의해 통합 관리의 범위를 시험실과 시험장비로만 한정하여, 품질관리자의 인접 현장 통합 배치가 불가함.

<표 1>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주요 내용

대상 공사 구분	공사 규모	시험실 규모	배치 기준	비고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50㎡ 이상	특급 1명, 중급 2명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시행규칙 별표 5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50㎡ 이상	고급 1명, 중급 2명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중급 1명, 초급 1명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0㎡ 이상	초급 1명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차등적 기준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을 살펴보면, 공사 규모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공정률 및 기성 실적률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적으로 배치하여, 건설현장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인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공사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인 기간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둘 수 있는 차등적 기준을 허용함.
- 또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이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것을 허용함.

■ 획일화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해야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획일적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개선안 1) 전체 공사 기간 중 품질관리 업무가 적은 시기(공사 초기, 준공 전 기간)에 품질관리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에 따른 차등적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공사 초기 및 준공 전 기간에 품질관리자 배치 인원 또는 등급을 발주처와 협의해 축소 배치하는 방안(예: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서 특급 1명·중급 2명 → 특급 1명·중급 1명 또는 중급 2명)
- (개선안 2) 소규모 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근 현장에 대한 통합 품질관리 범위를 시험실과 시험 장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자 배치까지 확장하는 방안
 - 이를 위해, 인근 현장에 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시·군·구 지역 소재이거나,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로 하는 방안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를 20km 이내로 하는 방안

정광복(부연구위원 · kbjeong7@cerik.re.kr), 전영준(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건설 관련 대학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기관이자 첨단 연구기관, 산업과 정부의 협력 필요 -

■ 건설 관련 대학 교육의 현황

- 낮아지는 취업률과 줄어드는 입학생으로 인해 대학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식 습득이 손쉬워지면서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음.
 - 2017년 공학 계열 고등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원)의 전체 취업률은 70.1%임. 이 중 건축 분야는 72.8%로 공학 계열 중 취업률이 가장 높지만, 토목·도시 분야는 67.6%로 가장 낮음.³⁾
 - 토목공학과와 관련, 특히 지난 10년(2008~2018)간 입학 지원자 수와 졸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타 전공으로의 이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⁴⁾
- 한편, 기업은 대학 졸업자의 실무 역량 부족과 BIM과 같이 산업에서 확산 중인 기술에 대한 역량 부족을 지적해 왔음.
 - 대학교육을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학교육이란 측면에서는 실용성의 확보도 필요함.

■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문제

-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은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와 다가올 기술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창의 융합 인재의 양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음.
 - 취업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실무 교육이, 다가올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등의 역량 향상 교육이 필요함.
-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쌓는 교육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나 여기에는 전공 간 융합 기초와 공학교육인증제 등 전공 과목의 자율 편성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

3) 교육부 보도자료(2018. 12. 2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4) 토목공학의 입학 지원자 수는 2008~2010년 기준 평균 3만 6,872명에서 2016~2018년 기준 평균 3만 4,580명으로 8년간 약 6% 감소하였음. 졸업자 수는 2008년~2010년 기준 평균 4,945명에서 2016~2018년 기준 평균 4,351명으로 8년간 약 12% 감소함. 입학/졸업자 수의 Gap 분석을 통한 학과 유출 학생 수 산출 결과, 최근 3년간 매년 약 1,042명의 토목공학과 학생의 유출이 있음. ; 조훈희(2019. 5. 28),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분야」, 건설인재양성포럼 발제 자료, p.18.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부는 창의 인재 양성과 전공 간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이 활용되면서 실무 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
- 전문 엔지니어 교육을 지향하는 공학교육 인증은 해외에서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MSC (Mathematics, Science, Computer) 교과가 추가됨에 따라 전공 과목의 비중이 축소되고 산업이 요구하는 교과목을 새로 추가할 여지가 없어짐.
- 한편, 건설 관련 대학 졸업생의 진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설계 기술 혹은 시공 기술로 이해되던 실무 역량의 범위도 모호해짐.
- 건설 관련 대학 졸업생의 진로 조사⁵⁾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사/공공기관과 대학/연구소로의 취업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첨단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 건설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은 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이며, 기술 발전이 빨라짐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해외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공은 대학의 혁신 노력과 함께 기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연구 지원으로 가능했음.
 - 미국의 올린공대(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 MIT 미디어랩(MIT Media Lab), 퍼듀대학의 EPICS(Engineering Projects in Community Service) 등은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갖춘 것으로 소개됨.
- 기업은 학제 간 융합이 용이한 대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신상품·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대학은 그 과정에서 산업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특히, 독자적인 연구 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음.
- 산학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보유 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인정하는 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5) 4년제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연구소로의 취업 비중(32%)이 가장 컸고, 지방 국립대학은 공사/공공기관으로의 취업 비중(70%)이 가장 컸음.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기업으로의 취업 비중(88%, 현재직 포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조훈희(2019. 5. 28),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분야」, 건설인재양성포럼 발제 자료, p. 20.

4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

- 토목 수주 대부분 공종에서 증가, 건축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 수주 양호 -

2019년 4월 건설 수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한 11조 3,197억원을 기록함(<표 1> 참조).
- 수주액 자체도 4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1조 3,197억원을 기록함.
- 지난 3월 GTX 수주의 영향으로 22.6% 증가한 이후, 4월에도 23.8% 증가해 2개월 연속 양호한 모습을 보임.

공공부문, 토목 수주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

- 공공 수주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부진하였지만, 토목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한 1조 5,842억원을 기록함.
- 세부적으로 보면 토목 수주는 도로와 철도, 항만 및 공항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44.9% 증가한 1조 2,116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6.3% 감소한 2,313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1~3월까지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0.2% 감소한 1,413억원으로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1> 2019년 4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8. 4월	9,143.8	1,443.7	835.9	607.8	430.8	177.0	7,700.1	369.0	7,331.1	3,965.3	3,365.7
2019. 4월	11,319.7	1,584.2	1,211.6	372.6	231.3	141.3	9,735.6	907.5	8,828.0	5,693.3	3,134.8
증감률	23.8	9.7	44.9	-38.7	-46.3	-20.2	26.4	145.9	20.4	43.6	-6.9
2018. 1~4월	41,864.3	6,100.2	4,293.5	1,806.7	775.8	1,030.9	35,764.2	7,029.3	28,734.9	17,775.8	10,959.1
2019. 1~4월	41,470.2	7,265.7	4,999.2	2,266.5	1,358.4	908.1	34,204.5	6,989.6	27,214.9	17,426.2	9,788.8
증감률	-0.9	19.1	16.4	25.5	75.1	-11.9	-4.4	-0.6	-5.3	-2.0	-10.7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민간부문, 토목과 주택 수주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

- 민간 수주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4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양호한 9조 7,356억원을 기록함.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26.4% 증가함(<표 1> 참조).
 - 토목 수주는 발전 및 플랜트 수주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5.9% 증가한 9,705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재개발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4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조 6,93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43.6% 증가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한 3조 1,348억원을 기록해 부진하였음.

■ 건축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 수주가, 그리고 토목은 대부분의 수주가 양호

- 건축 수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 이외는 모두 부진했음(<표 2> 참조).
 -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4.8%, 40.9% 증가함.
 -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그리고 기타 건축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3.2%, 49.7%, 7.7% 감소해 부진하였음.
- 토목 수주의 경우, 대부분의 수주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도로 및 교량 수주와 철도 및 궤도 수주의 경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9.3%, 745.1% 증가함.
 - 항만 및 공항과 기계설치 수주는 예년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각각 148.6%, 751.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발전 및 송전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한 948억원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한편, 토지조성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하여 다소 부진하였음.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조성	항만 및 공항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2019. 4월	5,924.5	1,514.6	1,409.0	278.1	74.3	330.3	192.5	361.8	224.9	641.5	94.8
증감률	34.8	40.9	-23.2	-49.7	-7.7	159.3	745.1	-0.3	148.6	751.2	10.4
2019. 1~4월	18,784.6	5,003.9	4,108.2	1,262.1	322.7	1,815.5	3,512.4	1,228.5	851.8	2,660.3	654.3
증감률	1.3	0.1	-22.0	-0.5	-29.4	-20.2	3,065.3	11.1	100.1	66.3	-86.0

자료 :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2018~2019년 1/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2018년 건설업 매출액증가율 마이너스 기록, 전년 대비 12.87%p 하락 -

■ 2018년 건설업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마이너스 성장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8년 건설업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여 마이너스 값을 기록함(<표 1> 참조).
 - 2017년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11.67%였으나 2018년 -1.20%로 전년 대비 12.87%p 하락함. 건설업 매출액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내림세로 돌아섬.
 - 2018년 총자산증가율도 2017년 3.76%에 비해 4.33%p 하락하여 -0.57%를 기록함.

■ 2018년 건설업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개선

-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전년대비 비슷하여 양호한 수준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17년 5.65%에서 2018년 6.86%로 1.21%p 상승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017년 6.24%에서 2018년 6.32%로 0.08%p 상승함.
 - 2018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은 644.37%로 전년의 685.89% 대비 41.52%p 하락함.
- 건설업 안정성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됨.
 - 2018년 자기자본비율은 44.99%, 부채비율은 122.26%, 차입금의존도는 20.94%로 2017년에 비해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되고, 차입금 의존도도 감소함.

<표 1> 2018년 주요 경영 지표

(단위 : %)

구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7	3.76	11.67	5.65	6.24	685.89	1.04	43.66	129.05	21.55
	2018	-0.57	-1.20	6.86	6.32	644.37	0.94	44.99	122.26	20.94
제조업	2018	4.53	4.48	8.14	8.09	1,023.87	0.88	61.02	63.88	19.36
전산업	2018	3.68	4.19	6.56	6.88	588.42	0.82	52.23	91.45	25.59

자료 : 한국은행(2019.06.04), 2018년 기업경영분석.

2019년 1/4분기 매출액증가율 마이너스 기록, 수익성 둔화, 안정성 악화

- 한국은행의 「2019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증가율이 2018년 4/4분기 대비 더욱 하락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함(<표 2> 참조).
 -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4분기 -4.30%였으나 2019년 1/4분기에는 -5.97%로 더욱 하락함.
 - 총자산증가율은 2.93%로 2018년 1/4분기의 0.95% 대비 1.98%p 상승함.
- 건설업 수익성 지표 역시 2018년 1/4분기에 비해 하락함.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7.28%,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6%, 이자보상비율은 604.12%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4%p, 1.60%p, 307.36%p씩 하락함.
- 건설업 안정성 지표도 모두 하락함.
 - 자기자본비율은 44.69%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23.78%, 19.79%로서 전분기 대비 증가함.
 - 수익성 악화로 인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짐.

<표 2> 2019년 1/4분기 주요 경영 지표

(단위: %)

구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구분	성장성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세전순 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 상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증가율	자기자 본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8 1/4	0.95	10.12	7.76	911.48	0.82	2018 4/4	-4.30	46.61	114.52	22.84
	2019 1/4	2.93	7.28	6.16	604.12	0.85	2019 1/4	-5.97	44.69	123.78	19.79
제조업	2019 1/4	2.20	6.36	5.75	625.92	0.80	2019 1/4	-3.68	59.16	69.02	19.91
전산업	2019 1/4	3.16	5.80	5.25	479.22	0.82	2019 1/4	-2.41	53.57	86.68	22.84

자료 : 한국은행(2018.6.18), 2019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건설경기 하락 본격화에 대비해야

-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 경영 실적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DI 경제동향(6월호)」에 따르면 건설기성이 2018년 2월부터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값을 이어가고 있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 규모가 전기 대비 0.8% 감소함.
 - 당분간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기술 촉진 연구사업 최종 평가에 미래기술전략연구실 유위성 연구위원 참여
6.14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제도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방안 회의에 법제혁신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6.19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 참여

주요 발간물 및 활동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기획 세미나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전략 모색	• 본 세미나는 주택, 도시재생, 부지 확보 차원에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한 도심 공간 활용 방안을 주제로 6월 1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됨. 본 세미나를 통해 연구원은 도심 공간 가치를 높이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제1주제는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모색'으로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이 발표하였음. -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0년대 들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폭이 수도권에 비해 커, 서울 아파트 공급 비중 감소, 서울 신축(경과연수 5년 이내) 아파트 재고 감소로 이어짐. - 도교·오사카, 뉴욕은 도심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방향성임을 인식하고, 민간을 활용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도시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 허 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다음으로, 이태희 부연구위원이 제2주제 '도시재생을 재생하자'를 발표하였음. 이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낮은 사업 효과성에 비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1980년대 세필드시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세필드시는 도시재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투자 유치와 인재 유입임을 인식, 실질적인 효과는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났음. - 현재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함. 나아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2000년대 이후 세필드 사례처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김성한 부연구위원이 제3주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 수단으로 성공적인 준공 사례를 배출하였지만, 최근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요구 때문으로 분석됨. -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협상 및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가장 주요할 것임. -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업이지만 공공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크지 않음. 따라서 도심이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SOC 투자

정부는 지난 4월 생활 SOC 확충에 3년 동안 30조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4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 시설과 기초 인프라 공급에 14조 5,000억원, 공보 육 인프라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에 2조 9,00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에 1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지역의 생활 SOC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SOC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금번 생활 SOC 확충을 위한 투자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먼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산업화 과정을 거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성장은 그에 못 미쳐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나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머서(Mercer)의 ‘세계 삶의 질·생활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인프라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 공급된 기존 SOC들은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부추겼다.

일각에서는 왜 이 시점에 생활 SOC 투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현시점에서의 생활형 SOC 투자는 시의적절하다. 먼저, 최근 여러 경제 지표들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들

을 보내고 있고,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생활형 SOC 투자는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전 산업 평균 12.9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높다.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효과인 고용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0.2명을 기록하여 전 산업 평균인 8.7명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48조원이라는 투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많다. 사실 이 규모는 지역의 생활형 SOC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과 지역 간에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간 생활형 SOC의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또한 사실상 금번 생활형 SOC 투자 계획이 양적인 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존에 공급된 생활형 SOC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민이 생활형 SOC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투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생활형 SOC 투자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 경제의 성장 토대를 질적으로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생활형 SOC 투자에 대한 논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공적인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경제, 2019.5.8>